

여론으로 본 20대 총선 평가

깨어진 여대야소의 신화:

한국일보 조사로 본 여소야대의 징후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한국일보 객원기자
2016. 4.

1. 20대 총선의 의미와 여소야대/3당체제의 등장

- 20대 총선의 관련 포인트 : ① 대통령 성적표 ② 여당발 권력재편 ③ 3당 체제 향방
- “여소야대” 및 3당 체제 등장

4.13 총선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받은 선거였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4년차에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종 성적표를 엿볼 수 있으며 집권여당발 권력재편과 차기 대선의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당한 야권의 성적표도 관심사였다. 이는 곧 3당 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대부분 임기 중후반에 실시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장이었다. 임기 4년차까지 40%를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박근혜 정부에게 총선승리를 통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권심판론이라는 여론의 예봉을 벗어나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지 여부도 이번 총선의 관심사였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의 임기 4년차 국정평가를 비교해보면, 2월 21-22일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01호). 이번 선거가 지나고 2017년을 맞이하면 급격하게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사실상 이번 총선이 최종 성적표를 의미하는 상황이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파가 철저하게 여당의 공천과정을 주도했고, 그 목표는 비주류를 배제하고 친박 중심의 여당권력 질서로 재편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단입제 하에서 임기말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비주류 내에서 차기 대선주자가 나오고, 이들 소수와 비주류 대통령이 탄생하면 과거권력과 신권력 간의 세력 재편이 반복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의 열린우리당 창당이 그러했고, 임기 초 2008년 총선에서 MB계가 친박계를 공천에서 배제하며 소위 ‘공천학살’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2015년 12월 13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2016년 1월 창당을 선언하고, 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합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이번 총선은 제1야당이 분열하여 “일여다야(一與多野)”구도로 치러지게 되었다.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 3당 체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 역시 한국 선거 및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권과 언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여대야소, 야권패배”의 전망이었다. 야권에서 변수는 총선 막바지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던 국민의당과 전통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성적표 정도로 여겨졌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200석 혹은 180석 예상까지 나왔고 165~175석 정도로 큰 격차의 여대야소 전망도 제기되었다(오마이뉴스 2016/03/27; CBS 2016/03/30; JTBC 2016/04/07). 각 당의 자체분석은 새누리당 145~150석, 더민주 100석, 국민의당 35석 전후를 전망했지만,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은 새누리당 155~170석 전후, 더민주당 95~110석, 국민의당 25~35석 수준으로 새누리당 과반은 무난할 것으로 점쳤다(매일경제 2016/04/10; 중앙일보 2016/04/10; 서울경제 2016/04/10). 극히 일부 언론에서만 “D-5, 여당지지 속속 이탈, 여대야소 흔들린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정한울·김희경 2016; 정한울 2016).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3당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림1] 한국일보 4월 8일자 1면



2. 총선결과와 의미 : 순차적 여야심판론이 3당 체제 구축

- 정권심판론의 점화 41.2%(1차)→58.5%(4차), 야당 심판론 건재 46.6%→40.3%
- 새누리당 심판, 지역구에선 야당선택 → 더민주당 경고, 정당투표에선 국민의당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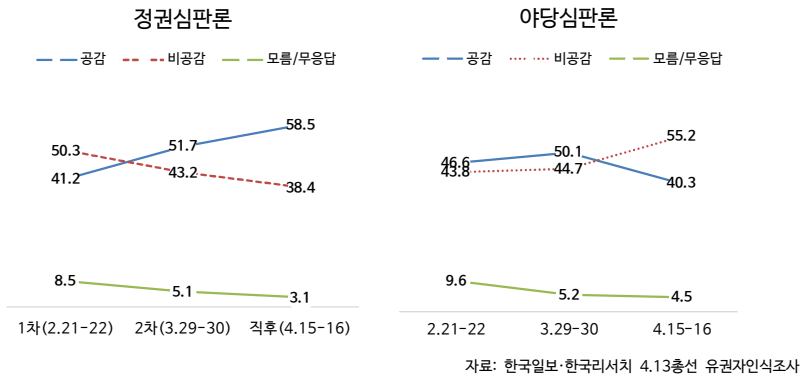
예측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이번 선거에서 여대야소 전망이 무너지고, 제1당의 교체까지 나타난 원인은 무엇보다 선거 초반까지 잠재되어 있던 정권심판론이 선거 중후반을 거치며 점화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여당에 대한 태도와 야당에 대한 태도가 과거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변동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2012년 선거부터 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야당에 대한 심판론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선거 전후 네 차례 실시한 전국 유권자인식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조사는 박대통령 취임 3주년 시기인 제1차 조사(2.21-22), D-14 시점 전후의 제2차 조사(3.29-30), D-6 전후의 제3차 조사(4.5~6), D+2~3에 실시한 제4차 조사(4.15~16)에 이루어졌다(조사 정보 부록 참조)



조).

우선, 2월 말에 실시한 1차 조사까지만 해도 야당심판론(46.6%)이 여당심판론(41.2%)을 능가하였고, 여당심판, 야당심판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무관심과 냉소가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는 특히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야권분열로 정부여당보다 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공천이 마무리된 3월 말 시점에 실시한 제2차 조사부터 정부심판론이 급증하고 있다. 야당심판론도 50.1%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여당 심판에 동의하는 비율이 10.5%p 상승한 51.7%까지 증가하여 여와 야에 대한 심판론이 균형국면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최종 투표 단계에서는 야당심판보다 정부여당 심판이 우선이었다. 정부여당 심판에 대한 동의가 58.5%까지 상승하였지만, 야당에 대한 심판론은 40.3%로 초기의 수준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다. 체감경제의 악화로 경제심판론의 여건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3월말 친박-비박 공천갈등을 계기로 급격하게 정부여당에 대한 국정평가가 악화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2] 총선거도의 변화 :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에 대한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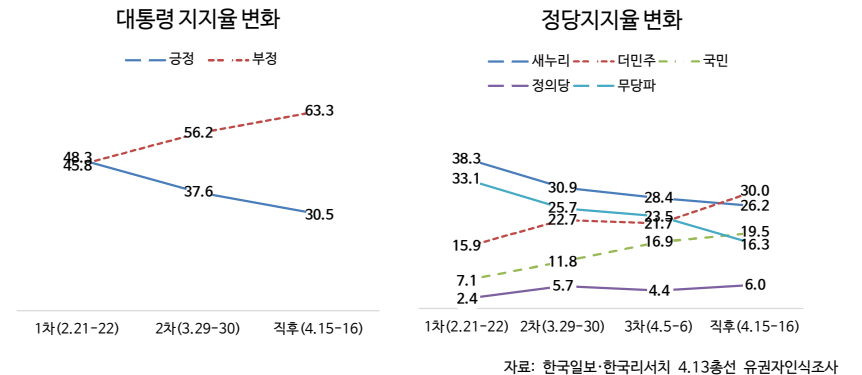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2월 조사에서 48.3%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조사에서 37.6%로 떨어졌고, 선거 후 조사에서는 30.5%로 추락했다.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2월 조사에서 38.3%였지만 한 달 새 30.9%로 7.4%p 하락했고, 3차 조사에서 28.4%, 4차 선거직후 조사에서는 26.2%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조사 15.9%에서 2차 조사 22.7%로 오른 후, 여당 못지않은 공천파동 직후인 3차 조사에서는 21.7%에 그치면서 정당투표에서 국민의당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사후조사에서는 30.0%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선전과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더민주당의 온전한 승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완패했을 뿐 아니라 정당투표에서는 3위까지만 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888만표(37.0%)를 얻었지만, 비례투표에서는 606만표(25.5%)에 그쳐 12%p만큼 득표율이 낮아졌다.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더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정당투표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더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순차적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¹⁾ 반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하고, 정당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더민주당(25.5%)을 제치고 2위 (26.7%)를 점하는 약진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도 1차 조사 7.1%에서 2차 조사 11.8%로 상승했고, 3차 조사에서 16.9%, 사후 조사에서도 19.5%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국민의당의 선전 배경에는 과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야당심판론에 대해 일관된 동의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3]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변화



3. 소수의견, 왜 여대야소가 흔들린다고 보았나: 세 가지 신화의 균열

- 3대 신화 : ① 보수=콘크리트 지지층론 ② 기울어진 운동장론 ③ 야권분열=필패론
- 선거 전 여대야소 전망의 균열 조짐 뚜렷해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 여대야소를 전망한 가운데 필자 및 한국일보가 여대야소 전망이 흔들린다고 주장한 이유는 여대야소 예측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신화화된 주요 논거들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²⁾ 수도권에서 수십개 지역구가 선거 직전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여대야소를 전망한 논거는 ① 보수층=콘크리트 지지층 ② 기울어진 운동장론 ③ 야권분열=필패론이라는 세 가지 신

1) 순차적 심판 개념은 필자가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2) 물론 필자 역시 지역구에서의 1, 2당의 전면 교체, 비례정당투표에서의 2, 3위 교체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칠 가능성은 염두에 두었지만, 122석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으며, 선거 직전 선거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 2위 싸움보다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2, 3위 싸움에 집중한 탓에 여소야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았다.

화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선거 전 세 차례의 조사결과를 보면 여대야소 전망을 떠받치는 3대 신화에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보수층=콘크리트 지지층” 신화의 균열

여대야소 예측이 빗나간 원인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한 신화가 작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여대야소 예측의 근거에는 정부여당의 지지는 강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공고한 반면 야권이 분열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은 물론 그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기간 중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높은 지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정권을 떠받치는 세 축인 이념적으로는 보수층, 세대로는 ‘5060세대’, 지역으로 보면 TK/PK 지역 유권자들의 강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KO 오피니언리뷰 제201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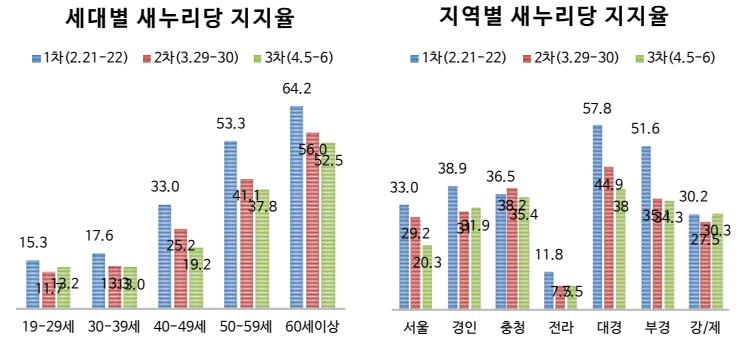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일보의 유권자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선거 전부터 “콘크리트 지지기반”의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차 조사까지만 해도 강한 지지기반의 위력은 유지되었으나 여야 공천 파동이 끝난 직후 3월말에 실시한 2차 조사부터는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균열과 이탈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소위 비박계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공천 배제하는 과정에서 “공천유예”, “옥쇄파동”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친박 대 비박간의 공천갈등이 극에 달했다. 결국 유승민, 이재우 후보 등 문제가 된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 결정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강고한 지지층에 발생한 균열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야당 역시 “셀프공천” 논란과 당대표의 당무 거부, 이를 되돌리기 위한 “사죄 퍼포먼스” 등으로 큰 내홍을 겪었지만, 공천 파동의 여파는 새누리당에 더 크게 미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KO 여론리뷰 제2016-03호).

우선 정당 지지율의 차수별 변화 추이를 보면 공천파동의 진원지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과 공천시기를 전후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5060’ 고령세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53.3%~64.2%에 달하던 50대,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2차 조사에서 41.1%~56.0%까지 떨어졌고 3차 조사에서는 37.8%~52.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도 1차 조사에서 51.6%~57.8%에 달했던 PK와 TK 지역 새누리당 지지율이 2차 조사에서 35.1~44.9%까지 떨어졌다. D-6 즈음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PK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34.3%, TK 지역에서는 38.0%까지 하락했다. 여전히 타 세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가장 두드러진 하락폭을 보여주었다. 수도권과 40대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하락세였다.

정권심판론에 대한 동의비율에서도 같은 패턴이 드러난다. 정권심판에 대한 동의는 전 세대, 전 지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상승폭으로 보면 ‘5060세대’, TK/PK 지역에서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 시점에 33.8%, 60대에서 20.8%에 불과했던 정권심판 여론이 선거 직후 4차 조사에서는 각각 53.6%, 42.0%로 20%p 가량 상승했다. TK지역에서는 23.3%, PK 지역에서는 39.5%에 불과했던 정권심판론이 사후 조사에서는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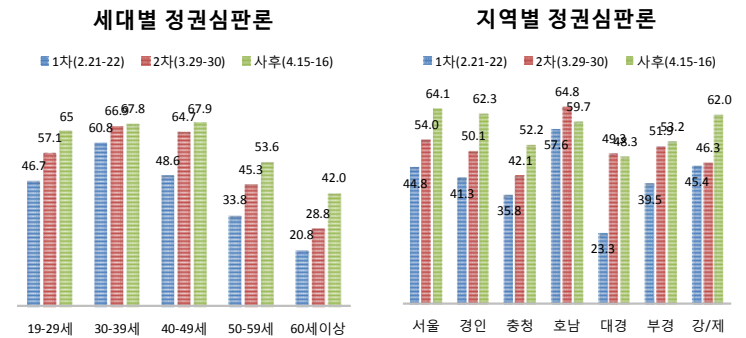
53.2%까지 치솟았다. 이번 선거만 보면 TK/PK, ‘5060세대’를 현 정부여당의 지지기반으로 보기 힘든 수준이다. 그 외 세대에서는 20대와 40대에서 1차 조사 대비 각각 18.3%p, 19.3%p 상승했고, 수도권 및 충청 지역에서도 선거 막판에 정권심판론이 급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세대별, 지역별 새누리당 지지율 변화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흔들리는 여소야대” 제2016-06호(4월8일자)

[그림5] 세대별, 지역별 정권심판론 동의 비율 변화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흔들리는 여소야대” 제2016-06호(4월8일자)

2) 기울어진 운동장 신화: 그레이 보트(Grey vote) 대 앵그리 보트(Angry vote)?

그레이 보트의 증가 : 보수우위 환경

여대야소의 전망을 과대평가한 두 번째 편견은 보수층의 강한 결집에 대한 신화와 함께 보수층의 규모가 비대칭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실제로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른 5060세대의 증가로 보수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고령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그들 고령세대 특히 노인투표(grey vote)의 구성비가 커진 것은 유리한 환경임에 분명하다(정한울 2012).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20대 총선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42,056,325명 중 60대 이상은 23.4%, 50대가 19.9%로 4년 전에 비해 각각 2.7%p, 1.0%p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0.6%p, 30대에서는 2.3%p, 40대에서는 0.9%p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선거부터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규모의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다.

[표1]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 변화 :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비교

	19대	20대
총투표자수	40,181,623	42,056,325
20대	18.2	17.6
30대	20.4	18.1
40대	21.9	21.0
50대	18.9	19.9
60대 이상	20.7	23.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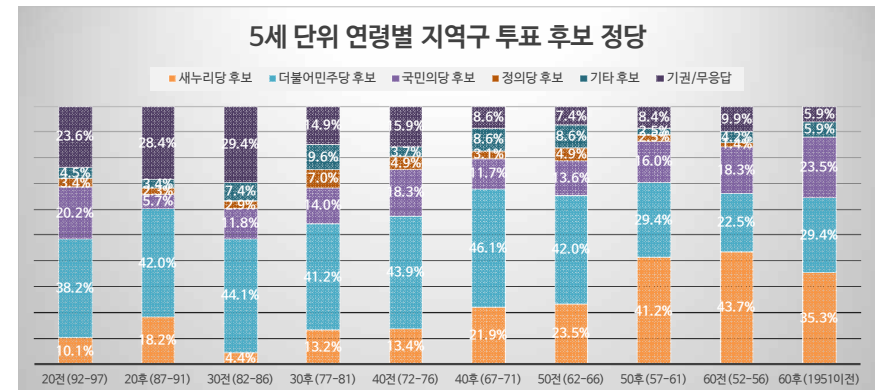
균형 요인 1 : 40대의 반여성향 및 50대 초반 세대의 코호트 효과

여대야소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중요한 신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과거에는 보수성향(2002년 대선 이전)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여야 균형을 취하던 40대가 대체로 강한 야당 성향을 보임으로써 세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40대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0년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4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10~15%p 이상의 우위를 보였다(이내영·정한울 2013a). 또한 2012년 대선 기준으로 새롭게 50대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45~54세(1958년생~1967년생)의 경우, 이전 세대인 55세 이상의 고연령 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이후 세대인 1968년 이후 출생 세대가 젊은 시절의 진보적 성향을 보인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1968년생에 비해서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면서도 1957년생 이전의 고연령 세대처럼 보수성이 강화(reinforcement) 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이들의 투표성향이 젊은 시절의 진보성을 유지하느냐(cohort effect), 나이 들면서 보수화되는 연령효과(aging effect)의 영향을 받느냐가 앞으로 선거구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정한울 2015; 이내영·정한울 2013b). 이는 ‘5060’ 그레이 보트의 증가가 반드시 보수여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림6]은 제4차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에서 5세대위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물어본 결과이다.³⁾ 40대 전반(44세 이하)까지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20%에 미치지 못한 반면, 40대 후반은 21.9%, 50대 초반은 23.5%로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그러나 50대 후반에서 새누리당 후보 투표율이 41.2%, 60대 초반에서 새누리당 후보 투표율이 43.7%로 나타나 50대 후반 세대와 50대 전반기, 40대 후반기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에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50대 초반까지는 야당 지지가 1순위인 반면 그 이후부터 새누리당 지지가 1순위로 바뀌고 있다. 이들이 50대 중후반으로 진입할 때 현재의 성향을 유지할지, 아니면 앞선 세대들처럼 보수화 경향이 강화될지는 향후 한국정치구도를 좌우할 문제가 된다. 그레이보트의 증가가 곧바로 선거에서 보수층의 승리 공식으로 전환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림6] 40대 후반~50대 초반 유권자들의 지역구 투표 정당



자료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 4차(4.15~16)

균형요인2: 2030 Angry voter의 투표참여(?)와 5060 Grey voter의 결집력 약화

그레이보트 증가의 정치적 효과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인 5060세대의 투표결집력이 이완되고 반대로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2040세대에서 야당 지지층의 투표결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1, 2, 3차 데이터 및 선관위의 유권자 투표참여의향 조사 등 선거 전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2040세대의 적극적 투표의향이 19대에 비해 높았고, 5060세대의 적극적 투표의향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KO여론리뷰 제2016-06호). 세대별 투표율은 추후 선관위가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통해 심층 연구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초경합지역이 막판까지 줄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2040세대의 투표의향이 5060세대에 비해 높아진 것은 분명 야당이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우세를 거둘 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들 2040세대의 높아진 투표의향은 취업, 고용불안, 소득, 교

3) 사후 조사의 특성상 승자 오버리포팅(over reporting) 효과가 작용하여 더민주당 지지율이 과대대표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과소대표된 양상을 보인다. 투표자 896명 중 새누리당 후보 30.7%, 더불어민주당 39.6%, 국민의당 후보 16.0%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결과보다 과소 대표되어 있다.

육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자발적으로 투표로써 항의(protest voting)한 결과로 보인다(동아일보 2016/04/10; 서울신문 2016/04/10; 한국일보 2016/04/08).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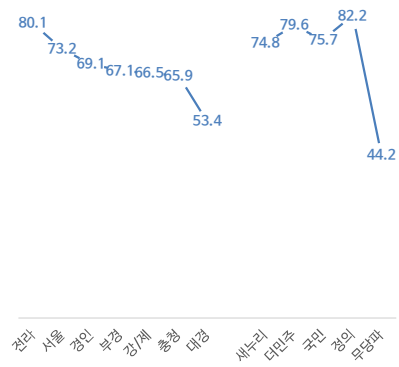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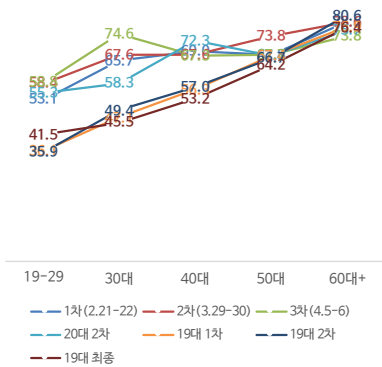
지역이나 정당별로 봐도 호남, 수도권 지역의 적극적 투표의향이 TK/PK 지역의 투표의향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과거 상대적으로 적극적 투표의향이 강했던 새누리당 지지층(74.8%)이 더민주(79.6%)이나 국민당(75.7%)/정의당 지지자(82.2%)들의 투표의향에 못 미치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실제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그림8]의 투표의향 조사 결과처럼 울산울산을 제외한 TK/PK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반면, 호남과 서울(전남 > 세종 > 전북 > 광주 > 서울)에서 평균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여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문제가 선거 임박해서야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공천과정 및 선거 공약/캠페인 과정이 부실화되었고, 특히 후보 공천 과정이 신뢰성 떨어지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층과 무당파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무당파층의 투표의향은 44.2%로 이번 선거가 무당파층까지 투표에 참여시킬 유인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림7] 세대별 적극투표의향 비율 비교

[그림8] 거주지/지정당별 적극투표의향 비율

세대별 적극 투표의향

지역/정당별 적극 투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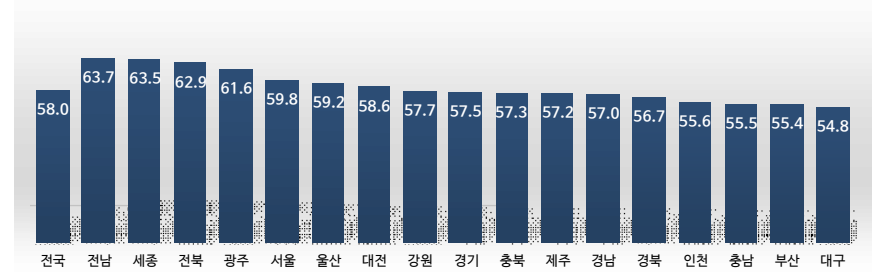


[그림7] 출처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 1~3차(2016), 중앙선관위 (유권자인식조사 1~2차(19대 총선; 20대 총선), 중앙선관위 최종투표율 자료

[그림8] 자료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 3차(4.5~6)

[그림9] 20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

20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



자료: 중앙선관위 20대 총선 투표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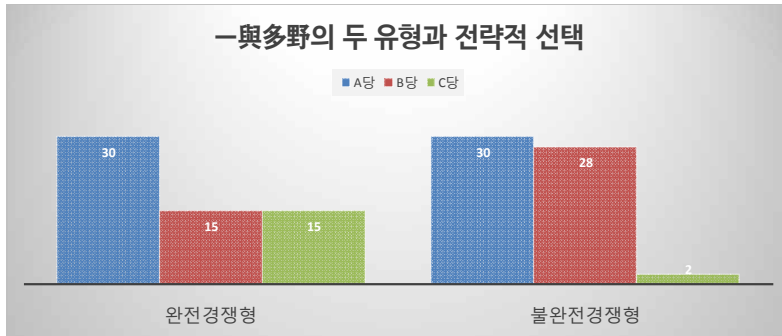
3) “일여다야 = 야권 필패”의 신화

- “일여다야”의 두 모델 : “대칭형 일여다야형”과 “비대칭형 일여다야형”의 구분 필요성
- 비대칭형은 사실상 1:1구도, 분할투표 통해 야당 승리 가능

이번 선거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오판했던 것은 “일여다야” 구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단일화 여부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탓이 커 보인다. 실제로 더민주의 선거운동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중심, 전략적으로는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전략에 집중했다. 박빙의 구도 하에서 일여다야 구도는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1 구도에 비해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수도권 경합지역의 향방이 전체 선거결과를 좌우하고, 수도권의 일여다야 구도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단일화 전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 주장이다. 필자는 일여다야 구도가 소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지만, 유형에 따라 반드시 단일화가 최적의 전략인 것은 아니고, 일여다야 구도가 실제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향후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교화해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경쟁하는 야당이 당선가능성에서 대칭적인 대칭형 일여(A) 다야(B와 C 경쟁)구도와 야당 중 일당은 당선가능성에서 1, 2위(A와 B)와 단독으로 경합이 가능한 비대칭적 일여다야구도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4) 현재 많은 언론들이 인용하고 있는 KBS 출구조사에 기초한 세대별 투표율 자료는 출구조사자료를 활용한 잠정적인 추정치일 뿐 아니라 2012년 총선, 대선 모두에서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데이터라는 점에서 확정적인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KO여론리뷰> 제2016-07호 참조. 2040의 투표참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별도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그림10] 일여다야의 유형화



출처 : <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07호 “4.13총선결과와 의미와 향후 대선정국 전망”

[표2] 일여다야 유형화 및 각 유형별 전략

	(1) 유형 : 대칭적 야-야경쟁	(2) 유형 : 비대칭적 야-야경쟁
정의	1) $p(A > B) = 1$ & $p(A > C) = 1$ 2) $p(A \leq B+C) \geq 0.5$	1) $p(A > B) = 0.5$ & $p(A > C) = 1$ 2) $p(B > C) = 1$
의미	어느 야당(B or C)도 단독으로 여당과 당선권에서 경쟁이 안되지만, 둘을 합치면 경쟁이 가능한 구도	야당 중 하나가 여당 A와 당선권에서 경쟁 가능하지만 나머지 야당은 당선권에서 거리가 있는 구도. 사실상의 1:1 구도
전략	단일화 전략	1) 1위 경쟁전략 우선 or 2) 단일화 전략도 가능하지만 필수 전략은 아님 (단일화의 비용을 고려해야 함)

전자의 경우 야권 후보들 간의 당선확률이 비슷하지만, 누가 나오든 당선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다수득표제 하에서 여당을 심판하려는 유권자들의 경우 누가 나왔을 때 당선가능성이 클지 모르며, 현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정권심판을 하려는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되어 A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구도이다. 이 경우 단일화 전략은 최적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대칭적 일여다야구도의 경우 3위(C)의 득표와 무관하게 1위와 2위 모두 당선확률을 갖고 경쟁하는 사실상의 1:1 구도로 볼 수 있다. C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C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투표자가 아닌 정권심판을 바라는 투표자라면 선택 시 혼란이 없다. 이 경우 유력 야당(B)의 선택은 (1) 당선가능한 양당 간 경쟁에 집중하는 1위 경쟁 전략과, (2) 3위와의 단일화 전략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로 기존의 관점에서는 단일화의 편익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번 총선을 살펴보면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는 호남 이외의 수도권, 영남, 충남 등에서 당선권에 들어 표를 분산시킬 역량 있는 후보들을 출마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경쟁력 있는 후보의 경우라도 10% 전후 대에 불과했다.⁵⁾ 즉 선거의 대세를 좌우

5) 물론 선거 막까지 지지율 상승으로 지역구에서도 득표율이 15~20%까지 상승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도권의 대부분 경합지의 경우 단일화를 해야 당선권에 근접하는 (1) 유형보다는, 사실상 1:1 구도인 (2) 유형에 가까웠다. 따라서 더민주당의 경우 2-3위간 “단일화 전략” 외에도 1위 여당과 1:1 구도 형성에 집중하는 “1위 전략”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분석은 이러한 구분 없이 (2) 유형의 경합지까지 (1) 유형으로 간주하면서 “단일화 실패=필패”라는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할투표 통한 순차 심판: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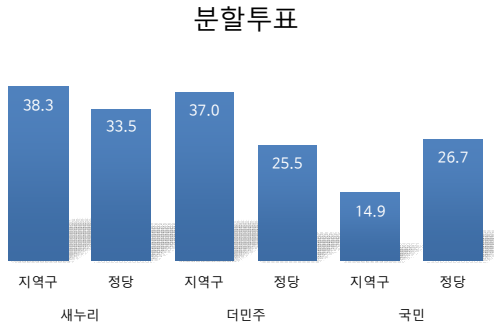
단일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이처럼 수도권 경합구도가 분열된 두 야당이 대칭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더민주당 후보쪽으로 경쟁력이 쏠려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스스로 전략적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 정권심판을 위해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2) 기존 양당정체에 대한 불만(더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로 표출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38.3%의 득표를 올렸으나 정당투표에서는 33.5%로 낮은 득표를 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지역구에서는 37.0%의 득표를 올려 전체 득표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졌지만, 수도권 경합지와 영남 일부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역구 1당을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는 25.5%에 그쳐 11.5%p가 다른 정당 지지로 이탈했다. 제1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에 경고가 표집이동에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지역구 총득표는 14.9%에 불과했지만, 정당투표에서는 26.7%로 제2당의 위치에 올랐다. 우선 지역투표에서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더민주당에 힘을 싣고, 정당투표에서는 양당에 대한 심판을 위해 국민의당에 표를 모아준 양상이다.

[그림12]와 [그림13]은 한국일보·한국리서치 4차 조사에서 지역구 투표 정당과 비례 정당 득표를 교차한 결과다. 국민의당은 정당투표의 경우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로부터 각각 15.5%, 17.8%씩 고르게 빼앗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정당투표에서 얻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 때문이다. 비례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19.0%인데 반해, 이들 중 더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25.3%로 6.3%p만큼 더민주당 후보에게 이득을 주었다. 그 결과 박빙의 수도권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 비대칭적 경합구도의 특성과 분할투표제도가 예상 밖의 여소야대를 가져올 수 있었던 세 번째 징후였다.

여와 제1야당 후보들과 당선권에서 다들 후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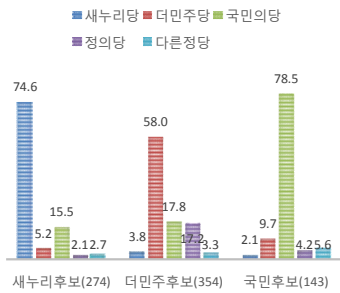
[그림11] 전국 집계 각 당의 지역구 및 비례정당투표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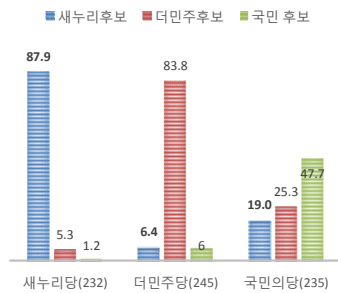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총선 투표율 자료

[그림12] 분할투표 이동1: 지역구 대비 정당 투표 [그림13] 분할투표 이동2: 정당투표 대비 지역구 투표

분할: 지역구 대비 정당 투표



분할: 정당투표 대비 지역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07호 "4.13총선결과와 의미와 향후 대선정국 전망"

4. 맺으며 : 소음에 섞인 신호 찾기

- 방법론 진단보다 인식 편견에 대한 진단이 우선
-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유권자 중심 시각으로의 전환 시급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여다야 구도 하에서 여대야소를 전망하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를 접한 후 오판을 낳은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오판을 낳았다는 “방법론적 희생양

찾기”가 앞 선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유행이 되고 있다. 그 비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공감하며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노력이 한국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큰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라 본다. 보다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을 모색하고 신중한 언론보도 문화를 만드는 것은 분명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⁶⁾

그러나 혼란스러운 조사 방법이나 언론 보도 못지않게 소위 민심을 읽는 주체들의 “인지적 편견”과 부실한 “분석틀에 대한 진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소음 속에 유권자들의 민심의 변화를 예고하는 다양한 징후와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다. 정권심판론의 징후는 분명했으며, 특히 여당 지지층 스스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었다. 제1야당에 대해서도 대안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는 혁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분에 휩싸인 모습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여론을 통해 표출되는 다양한 신호를 무시하고 민심의 향방에 대해 오판을 한 요인을 크게 (1) 보수=콘크리트 지지층 신화 (2) 기울어진 운동장 신화 (3) 야당분열=필패의 신화에서 찾았다. 이러한 편견과 분석틀의 한계의 이면에는 공급자 중심 즉 정당과 후보의 선거 전략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분석에 치중해온 관행이 있었다. 또한 실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공급자의 선거공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편견도 오판의 배경이었다. 앞으로 공급자 차원의 분석틀 외에 유권자들의 민심과 행태를 보다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모델이나 이론적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은 수요자 차원의 분석을 어떻게 해나갈 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선거였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분석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이번 선거에서 근원적으로 되짚어봐야 대목은 여소야대 결과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철저하게 “들러리”로 전략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과정에서 이번 선거의 “질”에 대한 평가는 누락되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의 공천과정과 선거캠페인 전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일개 여론조사의 한 개 샘플 이상의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당 지도부의 자기 전략과 공학을 실현하는 수단 이상은 아니었다. 후보 선출과정은 물론, 공약과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시간과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다.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가 그 과정을 대체했고, 지도부의 무책임한 밀어붙이기와 버티기 이상은 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오판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주권자로서 품위와 권위를 동시에 지킬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 맡겨야 하는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일 리 없다. 어찌다 우리 선거정치의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근원적인 성찰과 자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6) 이번 선거 이전까지 선거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과정은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정한울 2016b)를 참조할 것.

[참고문헌]

이준한. 2016. “2016년 총선결과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4.13 총선 평가와 전망: 확인된 민심, 남겨진 과제 토론회》 발표문 (2016. 4. 21).

이내영·정한울. 2013a. “세대요인이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 세대별 투표행태 및 구성효과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정한울. 2013b. “세대균열의 구성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제19권 3호. 39-83.

정한울. 2016a. “D+1~2,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정국” *KOREAN OPINION REVIEW* 2016-07호 (2016/04/18; 최종수정 2016/04/23)

_____. 2016b. “외주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1호. 63-105

_____. 2015. “세대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요인: 균형인가? 슬림인가?” 《EAI 오피니언리뷰》 제 2015-06호 (2015/07/01)

_____. 2012.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예측: 570만표 늘어난 5060이 대선 결정한다.” 《EAI 오피니언리뷰》 제2012-05호 (2015/07/25)

정한울·김희경. 2016. “‘興心 속속 이탈...여대야소 전망 흔들린다.’ <한국일보> 2016년 4월 8일자 1면.

국민일보. “막판까지 오리무중·수도권 승부는 선거 당일까지 계속된다.” (2016/04/12)

노컷뉴스. “조국 ‘새누리 180석 불보듯...제3당이 무슨 의미.’ (2016/03/30)

동아일보. “10곳 중 7곳 골 예측불허... 3黨 서로 “지지충 막판 결집중” (2016/04/10)

매일경제. “새누리 155~170, 더민주 85~100, 국민의당 25~32” (2016/04/10)

서울경제. “총선 D-3, 새누리 155~170석, 더민주 95~110석, 국민의당 25~35석.” (2016/04/10).

서울신문. “혼돈 그 자체” 90여곳 ‘피 말리는 초박빙’... 역전... 재역전” (2016/04/10)

이데일리. “노회찬 ‘안철수, 여권연대에 봉사...여 200석도 가능’” (2016/03/30)

중앙일보. “興·野 자체 분석...새누리 150석·더민주 100석·국민의당 35석.” (2016/04/12)

중앙일보. “새누리 “145석” 주장, 여론조사기관들은 “160석”” (2016/04/10)

한겨레신문. “새누리 170석 육박, 더민주 100석도 위태” (2016/04/10)

한국경제. “새누리 160석+α, 더민주 100석-α, 국민의당 30석 안팎 예상” (2016/04/10)

한국일보. “수도권 접전지도 새누리 고전, 야 분열에도 2강1약·2강1중 많아” (2016/04/08)

JTBC 뉴스룸. “새누리 165~175석, 더민주 75~85, 국민의당 20~30, 정의당 5~10” (2016/04/07)

[보고서 목록] 정한울 KO 여론리뷰 시리즈(KOREAN OPINION REVIEW)

1.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및 4.13 총선여론 심층분석: 국정 4년차 안보-경제 이중의 시험대 오른 박 정부, 여권에 유리한 총선 구도” *KOREAN OPINION REVIEW* 2016-01호 (2016/02/25).
2. “[4.13 총선여론 심층분석] 2012 대선 혼돈 안풍(安風), 어디로 갔나?” *KOREAN OPINION REVIEW* 2016-02호 (2016/03/07).
3. “총선 공천경쟁의 현실과 우려: 19대 총선 여론분석을 중심으로” *KOREAN OPINION REVIEW* 2016-03호 (2016/03/19).
4. “친박 여론의 진원지, 대구 민심의 이반 현상 분석” *KOREAN OPINION REVIEW* 2016-04호 (2016/03/26).
5. “총선구도의 변화 가능성, 정권심판론/레임덕 점화되나?” *KOREAN OPINION REVIEW* 2016-05호

(2016/04/01).

6. “D-5 총선구도의 변화, 흔들리는 여대야소” *KOREAN OPINION REVIEW* 2016-06호 (2016/04/08)
7. “D+1~2, 여소야대의 등장과 향후 대선정국” *KOREAN OPINION REVIEW* 2016-07호 (2016/04/18; 최종수정 2016/04/23)

[한국일보 유권자 인식조사 개요(1-4차)]

구분	내용
모 집 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 집 틀	· 유무선 전화 RDD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각 1,000명
표본크기	1차 (유선 293명, 무선 707명) 2차(유선 297명, 무선 703명) 3차 (유선 298명, 무선 702명) 4차(유선 298명, 무선 702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가 중 치	· 지역, 성, 연령 별 가중치 부여 (2016년 1월, 2월, 3월 행자부 발표 기준)
응 답 률	· 1차 조사 10.1%, 2차 조사 9.0%, 3차 조사 9.5%, 4차 조사 10.5%
조사일시	· 1차 2월 21-22일, 2차 3월 29-30일, 3차 4월 5-6일, 4차 4월15-16일 (각2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정한울 현 한국일보 객원 여론전문기자,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사/유엔사) 사령관 민간자문위원회(KAC) 여론분야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동아시아연구원(EAI) 사무국장, 여론분석센터부소장, 외교안보센터 부소장으로 재직 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행태, 선거정치, 국정관리, 대북 안보인식, 탈북자 조사, CSR, 정치참여 영역이다. 저서로는 <<18 그리고 19: 18대 대선으로 본 진보개혁의 성찰의 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으로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박근혜 현상>>, <<변화하는 한국유권자>>1~5, "외주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세대균열의 구성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 "반미여론과 한미 동맹" 등이 있다.



2015 EAI 여론분석연구

EAI 오피니언리뷰 (워킹페이퍼 시리즈)

- 2015-01호, “KOREAN VIEWS 2014: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대외인식의 딜레마” 정한울 (2015-01-20)
- 2015-02호, “경고등 들어 온 3년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약효 떨어진 민생우선노선, 국민 체감 여부가 관건” 정한울 (2015-03-04)
- 2015-03호, “국정소통의 4대 성공조건” 정한울 (2015-03-19)
- 2015-04호, “세월호 참사 1주기 진단: 저신뢰 넘어 불신사회 진입의 기로” 정한울 (2015-04-07)
- 2015-05호,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선거여론조사 : 4. 29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한울 (2015-05-26)
- 2015-06호, “[한일수교 50주년] 한일 상호인식에 대한 오해와 관계개선 솔루션 찾기” 정한울 (2015-06-15)
- 2015-07호, “세대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요인 : 균형인가? 쏠림인가?” 정한울 (2015-07-01)
- 2015-08호, “여론으로 본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평가: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 약화와 모멘텀 재점화의 방안” 정한울(2015-07-06)
- 2015-09호,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데이터 저널리즘 : 데이터 콘텐츠의 외주화 현상과 문제점 진단” 정한울 (2015-08-03)
- 2015-10호,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정한울 (2015-08-04)
- 2015-11호, “2단계(two stage) 선거경쟁이론으로 본 차기 대선구도” 정한울 (2015-08-04)
- 2015-01E호, “KOREAN VIEWS 2014: Changes in South Korea’s Status and Dilemmas of Foreign Perceptions” Han-Wool Jeong (April 22, 2015)
- 2015-06E호, “Misunderstandings in the Mutual Perceptions of Citizens from South Korea and Japan and Finding Solutions for Improving Relations” Han-Wool Jeong (June 26, 2015)

EAI 여론브리핑 (여론조사결과 요약 보고서)

[특별호]“제3회 한일공동여론조사 비교 데이터”EAI·言論NPO (2015-05-29)

[특별호]“제3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EAI·言論 NPO (2015-05-29)

단행본

서재혁·장용석·정재관 공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동아시아연구원 2015. 6. 5)

